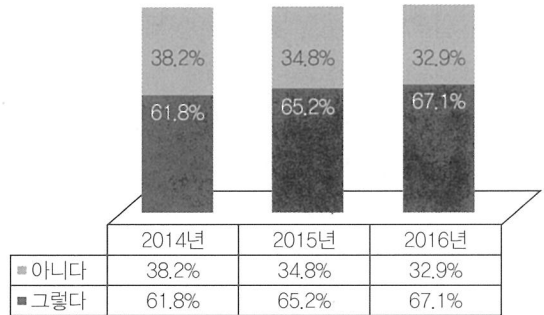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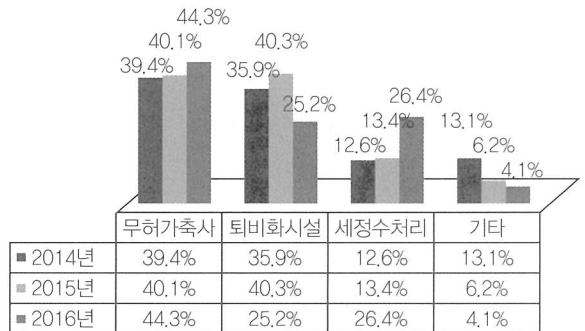
무허가 축사, 세척수 처리 등 환경문제 낙농경영 가장 큰 걸림돌

협회 낙농정책연구소에서 ‘2016 낙농 경영실태 조사’ 결과를 발표했다. 본 실태조사는 국내 낙농의 경영현실 및 당면과제를 파악하고, 낙농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, 그 중 설문에 참여한 629호 농가의 조사결과를 분석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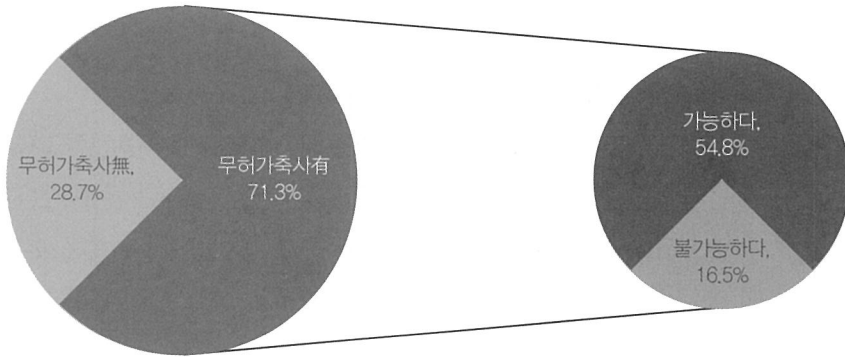


〈그림 1〉 환경문제로 인한 어려움 여부

조사결과에 따르면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낙농가의 약 67.1%가 ‘그렇다’라고 답해, 환경문제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환경현안으로 무허가 축사(44.3%), 세척수처리(26.4%), 퇴비화시설(25.2%)순으로 나타나, 무허가 축사와 세척수의 처리문제가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

〈그림 2〉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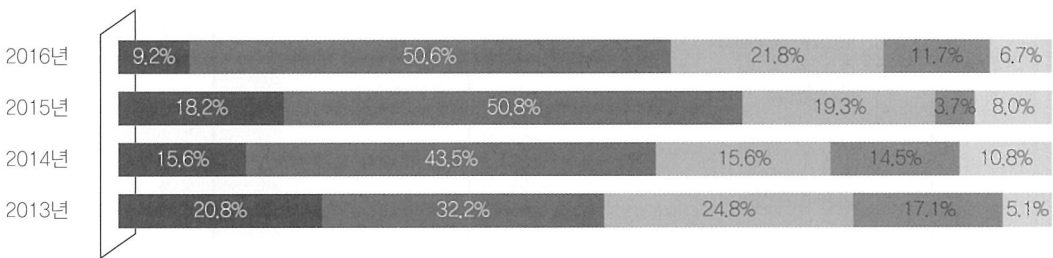
〈그림 3〉 무허가 축사의 보유여부 및 적법화 가능성

무허가 축사 보유실태는 ‘보유하고 있다’가 71.3%, ‘보유하고 있지 않다’가 약 28.7%로 나타났다.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중 16.5%는 적법화로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, 적법화가 불가능한 이유로 건폐율초과, 국유지점거, 비가림시설, 학교정화구역, 산지전용,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을 들었다.

방류수질기준 및 퇴(액)비 부숙도기준을 현재 보유한 처리시설로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‘충족시킬 수 없다’고 응답한 비율이 65.2%에 달했다. 따라서 대부분의 낙농가가 새로운 시설투자

가 불가피한 상황이며, 충족시킬 수 없는 주된 이유는 처리시설미흡, 공간부족, 시설노후화 및 비용부담 등을 꼽았다.

금후 3년 이내 목장경영 계획을 묻는 질문에 폐업이라고 응답한 농가들의 주된 이유는 환경문제 50.6%, 건강문제 21.8%, 부채문제 11.7%, 후계자문제 9.2% 등으로 나타났다. 이는 과거에 비해 낙농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,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도 폐업을 재촉하는 주요인임을 알 수 있다. 또한, 환경문제가 폐업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, 환경규제가 강화됨에



	2013년	2014년	2015년	2016년
■ 후계자문제	20.8%	15.6%	18.2%	9.2%
■ 환경문제	32.2%	43.5%	50.8%	50.6%
■ 건강문제	24.8%	15.6%	19.3%	21.8%
■ 부채문제	17.1%	14.5%	3.7%	11.7%
■ 기타	5.1%	10.8%	8.0%	6.7%

〈그림 4〉 낙농폐업의 이유

따라 낙농가의 환경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, 현실적으로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FTA 하에서 낙농에 대한 전망은 과거에 비해 큰 차이는 없으나, ‘매우 어려울 것이다(39.4%)’와 ‘어려울 것이다(53.7%)’가 전체 표본농가의 93.1%에 달해 낙농산업 전망을 비관적으로 보는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. FTA 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는 ‘국산 유제품시장 육성’ 33.5%, ‘전국단위 쿼터제 도입’ 29.0%, ‘학교우유급식 등 단체급식’ 17.2%의 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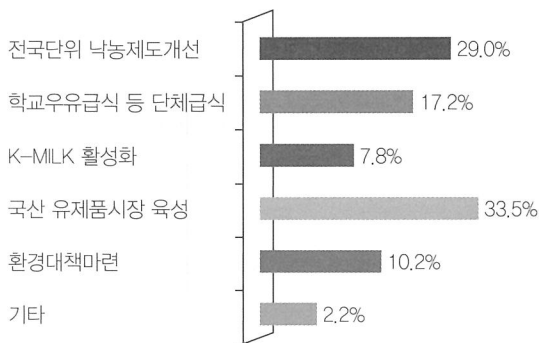
낙농가를 위한 전문강좌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과반이 넘는 52.0%의 낙농가가 인터넷강좌 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. 개설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(복수응답) ‘가축영양 및 사양관리’ 62.4%, 질병관리 56.8%, 가축번식 53.4%, 환경문제·세척수 처리 50.7%, 축산관련 법률 41.6%

순으로 나타났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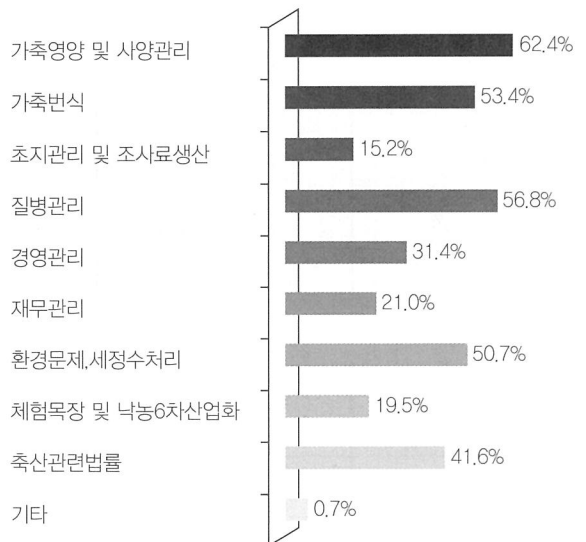
최근 국내 대학에서 낙농관련 학과가 대부분 폐과되고 있어 낙농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. 따라서 젊은 후계자를 포함하여 낙농분야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대한 체계적인 낙농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

조석진 소장은 ‘국내낙농은 감산압박과 원유기본가격 인하라는 이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화에 따라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’며, ‘낙농문제는 더 이상 정책 실패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정책을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’고 강조하였다. ☺

※보고서 전문은 협회 홈페이지 (www.naknong.or.kr) 낙농정책 연구소 ‘연구자료실’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

〈그림 5〉 FTA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



〈그림 6〉 인터넷강좌의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